

매일경제



아베, 韓·中과 대화 대신 대결 선택

도쿄도지사도 극우파가 장악...국방군 설치·군비 증강 예고
아베, 집권직후 미국 방문은 美·日동맹 강화 中견제 포석

기사입력 53454453<#;=73=89 | 최종수정 534544543#<=48=55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 동북아 새 리스크 日극우정권 ① ◆

**아베 정권의
주요 극우 공약과 실천 방법**

공약 내용	실천 방법	과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헌법 해석 변경	야당 및 국민적 공감대 필요
국방군 보유	헌법 개정	민주당이 장악한 참의원 통과해야
다케시마의 날 정부 행사 격상	정부 조치	한국 반발 외 특별한 제약 없음
센카쿠에 공무원 상주	정부 조치	중국 반발 외 특별한 제약 없음
교과서의 근린제국 조항 수정	교육위원회 결정	주변국 반발 외 특별한 제약 없음

그래픽=유제민

"총리 시절 때 참배하지 못한 것은 통한의 극치다. 다만 중·일관계를 고려하면 앞으로 갈지, 안 갈지를 선언할 생각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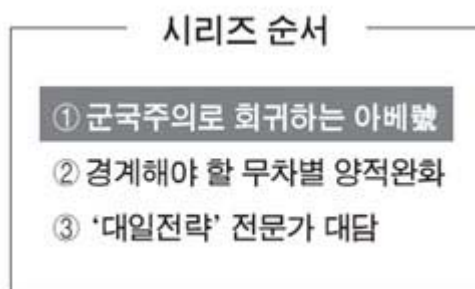
지난 7일 아사히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총리 취임 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답변은 앞으로 아베 총재가 전개할 극우노선의 방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속내는 극우, 실행은 현실주의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같이 민감한 이슈를 굳이 지금 언급해서 동북아 정세에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집권 후 실행에 옮기면 그만 아니냐는 생각이다.

2006년 처음 총리를 맡았을 당시 아베 총재 행보도 다르지 않았다.

고이즈미 직전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냉각된 주변국과의 관계를 복원한다며 한국, 중국을 방문해 놓고 일본 내에서는 과거사 부정, 개헌 준비,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 등 극우 행각을 이어갔다. 당시 그는 중군 위안부의 강제연행 사실 부정, 재일 동포 참정권 부여 거부 등도 서슴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재가 내건 슬로건은 `일본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강한 일본을 되찾자`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약에서는 역학관계가 다르다.

국방군 설치를 위해서는 현재의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내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참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이 때문에 취임 초기부터 헌법개정을 들고 나와 정치적 분란을 초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참의원 선거 전까지인 내년 상반기 동안 자신의 극우노선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참의원도 장악할 수 있다.



박철휘 서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다양한 극우공약 중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과거사와 영토문제"라고 설명했다.

당장 내년 2월 22일은 `다케시마(竹島)의 날`이다. 1905년 이날 독도를 일본 제국 시마네현으로 편입한 것을 기념한다며 2005년 시마네현이 지정한 날이다. 이를 국가행사로 격상

해 대대적인 행사를 열겠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대립은 특히 미국을 등에 업고 더욱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총재는 자신이 집권할 경우 평화헌법(헌법 9조) 개정과 함께 영해침범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재는 10일 발매될 월간 문예춘추에 자신의 정권

구상이 담긴 논문을 통해 “영해침범죄를 신설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재는 집권 후 첫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했다. 내년 1월 중순께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의 조기 방미는 미국과의 동맹 재구축이 외교정책의 핵심임을 시사한다. 속내에는 중국의 군사력 확충과 해양 진출 확대를 견제하려는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아베 총재는 이미 “중국과 센카쿠 대립이 격화한 것은 민주당 집권 때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군국주의적 핵심공약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국방군 설치, 국방예산 증강 등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아시아 전위대 역할을 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운다. 그는 “미국이 재정 긴축으로 국방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태평양 지역에서 존재감이 줄어들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일본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재는 연초 미국으로부터 군사력 강화에 대해 용인을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 뚜렷한 메시지가 나온다면 중국을 자극해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국과 과거사 문제, 중국과 센카쿠 문제는 당분간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다만 아베 총재의 이 같은 군국주의적 행보가 자민당 정권 내부의 견제로 약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박 교수는 “극우노선에서 아베와 자민당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2인자격인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은 자민당 집권시 민주당과의 연립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연립정당 구성이 확실시되는 공명당도 자민당의 개헌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는 8일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헌법 해석도 타당하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정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